

양돈협, 돼지고기 정부 긴급수매 거듭 요청

사료값 폭등... 돼지 한마리에 5만원씩 손해 양돈농가 줄도산 위기

-홍보부-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정부에 돼지고기 긴급수매를 거듭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최근 돼지고기 긴급 수매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데 이어, 김동환 회장은 지난 3월 12일 농림수산물식품부를 직접 방문하고 정부에 돼지고기 긴급 수매를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양돈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돈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사료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실제 양돈농가의 돼지 생산비(110kg)가 두당 27만5천원에 달하는 반면 울들어 지난 3월 11일까지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2,867원/kg으로 산지가격 환산시 22만1천원에 불과, 양돈농가들이 돼지 1두당 5만4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일 도축두수를 5만7천409두로 볼 때 전국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1일 31억원에 달해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돈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도매시장 전국 평균가격이 kg당 3,500원 이하시 수매를 실시하고 1일 도축물량의 10% 범위에서 수매하되, 수매물량 중 삼겹, 갈비 등 선호부위는 공매를 실시하고 등심과 후지 등 비선호부위는 대북지원 및 해외수출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해외수출에 따른 손실분은 수출 보조금 지원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기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수매를 3월 이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수매비용으로는 두당 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하루 500두씩 20일간 수매를 실시하면 1차 수매에 투입되는 예산은 3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양돈농가들도 모든 10% 감축을 추진하여 자체 수급조절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를 비롯해 모든 관련 기관의 역할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단기적인 돼지가격 안정 역할을 해왔던 수급안정기금이 지난해 4월 폐지되었고, 올해 정부가 수립한 긴급 사료구매자금 1조원 용자지원도 크게 실효성이 없어 이에 따른 대안으로 돼지고기 긴급수매를 지속 요청해왔다.

한편 양돈 농가들은 사료업체들의 사료값 추가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사료업계는 작년 한 해 세 차례에 걸쳐 사료값을 26% 올렸고, 올해 역시 지난 2월 초 7% 높은 데 이어 추가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료업체들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영업이익을 냈다”며 “회사들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가 공개를 통해 이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돈**